



F-X(차기 전투기)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2012년도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2011. 11. 11)의 한 쪽지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 사업목적에서 타당성 결여
2. FA-50 양산 사업과 KF-X 사업과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3. 무리한 사업 일정으로 인한 졸속 사업 가능성
4.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비가 급증할 우려

1.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

- ① '적극적인 억제 능력' 구비
- ② 북한 비대칭전력 대비
- ③ 현 보유 노후 전투기 도태로 전투기 전력 공백 심화
- ④ 북한의 대량 공중 기습 공격 대비 및 단 기간 내 공중 우세 확보

2.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① '적극적 억제전략'이라는 개념이 차세대 고성능 전투기 도입의 근거일 수 없고, 근거로 되어서도 안 된다.

- '적극적 억제전략'이라는 개념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부(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서둘러서 도입한 군사전략으로, 이를 뒷받침할 군사교리도 작전개념도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렇듯 막연한 군사전략에 의거해 무기, 그것도 향후 30~40년을 운용할 고액의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무책임한 행정으로, F-X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 한편 국방 당국자들은 ‘적극적 억제전략’을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기 위한 전략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국지전 하에서 휴전선 넘어 소위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한다는 것은 전면전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나 ‘비례성 원칙’ 등과 같은 자위권 발동의 기본 요건을 위배하는 위법적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공세적 전략은 방어 목적의 한미상호방위조약(2, 3조)이나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5조 1항)에도 위배된다.

②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고성능 전투기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을 과장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 국방부는 북한의 비대칭전력 유형을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 탄도미사일, 잠수함, 핵 위협 등으로 꼽고 있다.
-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은 윤광웅 전 국방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장사정포를 발사한 지 불과 6~11분(연합뉴스, 2004. 10. 18) 안에 제압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장사정포는 휴전선 바로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영공 내에서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며, 현재의 F-15K나 F-16 기종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는데 굳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고성능 전투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국방부가 내세우는 탄도미사일 위협도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북한 우위의 비대칭전력이 아니라 남한 우위의 비대칭전력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숫자는 최대 약 800여 기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200여 기를 포함해도 1000여 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약 1170여 기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압도한다. 게다가 한국의 탄도미사일은 북한에 비해 훨씬 정밀하며,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순항미사일 전력까지 포함한다면 남한의 전체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 전력의 비대칭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 잠수함 전력도 남한이 북한에 대해 열세에 있지 않다. 개수 비교에서는 20 : 26(국방연구원, '2003~4 동북아 군사력')으로 남한이 다소 열세이나 규모와 질에서는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 침투나 교전에 대비해 스텔스 기능의 차세대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 북한 핵은 기본적으로 공세무기가 아닌 방어무기이며, 만약 북한이 동족인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은 이미 정치군사적으로 패배를 당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또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곧 남한에 대한 전력 우위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국방부의 주장대로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다면 이는 북한이 핵을 공격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 스텔스 기능을 갖는 차세대 고성능 전투기가 이러한 위험한 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것은 남한에게 정치·경제·군사적 부담만 안겨주게 된다.
- 설령 핵을 포함한 북한의 전략시설을 선제 타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남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북 우위의 미사일 전력과 정밀타격전력—스텔스기보다 적은 비용과 스텔스기 못지않은 최소한의 희생으로—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③ 현 보유하고 있는 노후 전투기의 도태로 전투기의 전력 공백이 심화된다는 국방부의 주장도 매우 과장된 주장이다.

- 대북 전력 비교에서 남한이 우위를 인정하는 분야가 공군전력으로, 국방연구원은 '2003~4 동북아 군사력'에서 100 : 106으로 남한 우위를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이 지수 비교에서 MIG-19, 21, 23과 같은 북한 구형 전투기에 F-4, 5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성능인 남한 전투기보다 보다 높은 지수를 부여함으로써 북한 전력을 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남한은 그 이후에도 고성능의 F-15K 60여대를 도입해 왔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남북 공군 전력 격차는 국방연구원의 편향된 지수 부여 방식에 따르더라도 남한이 절대 우위에 있다.
- 항공전력은 특히 지상, 해상전력과 달리 개수 비교가 큰 의미가 없다. 질적 우위가 결정적으로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방부가 고성능

첨단 전투기의 도입 근거로 자주 인용하는 F-22 랩터와 F-16, 15와의 교전훈련 결과(1 : 144)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북한 전투기 중(약 550대)에서 남한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기종은 MIG 29 30대 뿐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공군전력의 도태로 인한 전력 약화는 남한 노후 전투기 도태보다도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반면 남한은 지속적인 F-15K와 같은 고성능 첨단 전투기 도입과 F-16K 등 보유 전투기의 성능개량사업으로 노후 전투기의 도태에도 불구하고 항공전력은 오히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 전투기 도태로 인한 전력 약화로 적정보유대수 대비 100여 대가 부족하다는 국방부 주장은 터무니없다.

-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군전력 비교에서도 한국은 방위충분성을 갖추고 있다. 일본과는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미 동맹국 중 5위의 공군 전력(전체 동맹국 전력의 4.14%)을, 8위의 공군 전력(전체 동맹국 전력의 3.95%)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에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A Report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by the Secretary of Defence』, July 2003). 중국은 전폭기를 포함하여 전투기 대수가 약 1500여 대(국방연구원, 『2009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로 한국의 2.7배에 달하나 대만, 인도 등과의 대치로 남한과의 전면전 시 실제 가용 공군전력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방위충분성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주변국에 대한 방위충분성을 내세워 공군전력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④ 북한의 대량 공중 기습 공격에 대비하고 단 기간 내 공중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항공전력 운용의 기본을 부정하는 상식 밖의 주장이다.

- 공군의 전력구조는 High-Medium-Low급으로 구성된다. 이 중 High급은 통상적으로 전략기동에, Medium급은 요격이나 해상 지원에, Low급은 근접항공지원(CAS) 등 지상지원에 운용된다.
- 전쟁 초기 대량 공중 기습 공격을 감행할 북한의 기종은 우리의 Low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MIG 17, 19, 21 등이다. 이러한 북한의 구세대 기종은 현 남한의 주력 기종인 F-16으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북한의 낡은 기종의 기습에 차세대, 그것도 스텔스 기능을 갖춘 고성

능 첨단 전투기를 도입해 대응하겠다는 것은 모기를 잡기 위해 칼을 꺼내 드는 격으로, 이는 전장에 따른 공군 전력 배분과 운용의 기본조차 부정하는 것이다.

3. 도입 반대 이유

① F-X 사업은 FA-50 양산 사업과 KF-X 사업과 중복되어 투자의 중복, 곧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 FA-50 양산 사업목적은 기 도태된 A-37 및 도태 예정인 Low급 F-5E/F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역시 노후 도태되는 Low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 목적을 내세우는 F-X 사업과 중복된다.
- 또한 KF-X 사업은 F-16보다 성능이 우수한 Medium급(사실상 High급) 한국형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F-X 사업과 중복된다.
- 더욱이 스텔스 기능이 차세대 고성능 전투기의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스텔스기를 포착할 수 있는 탐지기술은 개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스텔스는 허구”(한국일보, 2011. 10. 18)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스텔스 기능이 다른 기능들을 대체할 수도 없다.
- 따라서 남북 또는 주변국과의 공군전력비교로 볼 때 불요불급한 스텔스 기능 등을 갖춘 고성능 기종의 도입에 집착하지 않고 도태 전력의 보완과 공군 전력구조의 질적 변화를 꾀해 나간다면 F-X 사업을 폐기하고 FA-50 양산 사업과 KF-X 사업을 통해 이원적으로 전력을 수급해 나간다고 해도 방위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대만도 중국을 의식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고려에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닌 F-16C/D 개량형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② 그런데도 스텔스 기능에 초점이 두어지면 이 기능에서 앞서 있는 F-35가 F-X 사업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2002의 2차 F-X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타 기종에 비해 가격, 성능, 부품 등의 군수지원, 절충 교역 등의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 F-35는 미군이 요구하는 작전 요구능력(ROC)를 충족시키지 못해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소프트웨어 결함 등으로 미 의회의 경고까지 받는 등 양산 계획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 따라서 우리가 서둘러 도입할 경우 버전이 낮고 결함 많은 시험기 수준의 기종(쌍통 F-15에 이어 쌍통 F-35)을 도입할 위험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항공기가 개발되어 3~4년의 운영 기간을 거쳐야 온전한 성능의 항공기가 제작될 수 있다고 한다.
- 또한 F-35는 개발비의 급상승에 따라 가격이 급상승(1,300억 원, 1,600억 원이 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음, 신동아, 2011. 5월 호)하고 있다.
- 국방부는 2012년도 F-X 예산을 제출하면서 엔진을 포함 기체 예산으로만 5,663,132,361 달러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를 F-35 60대를 도입한다고 전제했을 때 대당 약 9,438만 달러다. 그러나 이미 F-35 대당 가격은 12,000만 달러를 호가하고 있고 14,000만 달러 이상 되리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총사업비 8조 3,000억 원의 F-X 사업은 50% 이상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차세대 전투기(FX) 운용유지비 비교

		
F-35A 라이트닝	F-15 사일런트 이글	유로파이터 타이푼
시간당 3500여만원 가격 : 1대에 1억 8800만달러 (약 2100억원) /2013년 미공군)	시간당 3200여만원 가격 : 1대에 약 920억원) /F-15K 기준)	시간당 930여만원 가격 : 1대에 1억 8000만유로 (약 1100억원) /특활기준

- 운영유지비의 폭증도 예상된다. 브래드 존스 보잉 미 공군 F-15 프로그램 개발 디렉터는 “F-15의 실제 (운영) 비용은 F-35가 실제 계획하고 있는 것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밝히고 있다. 부품 단종 등으로 F-15K의 운영유지비가 3년 만에 무려 8배나 상승(KBS 시사기획, 2011. 6. 28)한 사실에 비춰 보면 F-15K의 2배에 달할 F-35의 운영유지비가 국방예산에 지우게 될 부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2011년 3월 캐나다 의회 예산국이 F-35 65대의 도입비와 운영유지비가 3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0년 7월에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10조원의 3배가 넘는 수치(『대한민국 영공 방어, 이대로 좋은가?』, 김학송 의원실, 2011. 4. 7. ‘김종대 토론요지’)로 60대를 도입하기로 한 우리나라도 비슷한 규모의 운영유지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1년간 국방예산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
- 이에 국방연구원 등 일각에서 F-35K를 구매할 경우 기업참여권(IP)을 주는 ‘Best Value’ 정책에 따라 획득비용의 최소 50% 이상의 수출 물량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호주 등 공동개발국들이 이미 획득하기로 한 물량을 줄이고 있고, 또한 향후 F-35K에 대한 수요를 낙관할 수 없는 현 조건에서 이는 아무런 보장책이 없는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

③ 더욱이 F-35를 도입할 경우 미국이 정비장을 일본(2011년 말에 선정 여부를 결정)에 둘 가능성이 커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안보분야에서 일본에 코가 꺾이는 우려스런 상황도 예상된다.

④ 한편 차세대 고성능 전투기 도입 사업의 기종 결정은 2012년 10월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와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이다. 역대 최대의 무기도입 사업을 이토록 민감한 시기에 결정한다는 것은 역대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갈등을 불러와 국력의 소모와 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⑤ 2012년도 10월에 차세대 고성능 전투기의 도입 기종을 결정하는 하는 것은 구매 과정에 따른 일정을 보더라도 무리다.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내년 1월 제안요청서(RFP)를 후보기종 제작업체에 보낸다. ... 상반기 안에 각 업체로부터 회신을 받고 평가작업을 시작한다. ... 꼼꼼히 체크하기 위해서는 제안요청서 발송 후 보통 12개월 이상 걸린다”(한국일보, 2011. 10. 17). 이는 차세대 고성능 전투기 도입 사업이 줄속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내년 10월에 도입 기종을 선정하는 것은 일정상 도저히 무리라는 것을 의미한다.